

6공화국의 북방외교정책

I. 입안배경

정부는 그동안 자신들을 타도 대상으로 하는 범민주세력의 끊임없는 도전에 시달려야 했으며 남북관계에서도 항상 일관성이 없는 통일정책으로 인하여 수세적인 입장의 사면초가인게 사실이었다.

이같은 상황은 80년대, 특히 6공화국 들어 범민주세력이 스스로 변혁운동세력으로 질적 전환을 이루어 나가고 마.일을 포함한 제국주의세력을 변혁운동의 대상으로 규정해감으로써 더욱 증폭되었다. 이른바 반미운동은 40여년을 일관해온 지배세력의 반공·반북 이데올로기 주입정책의 효과를 무색케 할 정도로 빠르게 민주주의에 침투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이 가중되는 조건에서 다수 민중들의 정치의식은 점차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6공정권의 북방정책은 이러한 위기상황의 정치적·역사적 배경에서 일부 정책결정자들에게 의해 민족적 합의의 도출이 없이 태동하였다. 6공정권은 그동안 북방정책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궁극적인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 소련, 중국, 동구제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코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고 규정해 왔다. 다시 말하면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객관적으로 해 중소를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 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두개의 국가’ 존재를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고 이를 토대로 남북간 국가연합 형태의 과도기를 상징하는 흡수통합적 통일을 완성시켜간다는 것이 북방정책의 실행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결과 북방정책은 외부적으로는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외교노선 입과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이념적 지향을 혼란케 하고 남북관계에서의 수세를 모면하려는 불순한 동기에 6공정권의 일부 인사들에 의해 입안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소련과의 수교과정에서 ‘30억 달러 경협’이라는 무리한 비용지출을 감내해야 했던 것도 이같은 굴욕적 외교자세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II. 북한 고립화 전략

6공정권의 출범과 함께 가속화된 북방정책은 국제체제라는 ‘외부’의 요소와 국내체제라는 ‘내부’의 요소, 그리고 ‘분단체제’라는 한민족의 특수한 요소가 상호작용 하였던 것이다.

한편 해방 이후 정권이 성립된 지 40여년 동안 한국사회는 5·16과 5·17로 이어지는 군사독재권만이 지배권력을 독점해 왔으나 이들 정권은 마.일 등 일부

제국주의세력에 의해서만 정통성을 인정받았을 뿐이며 사회주의 국가들은 물론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세력들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당해 왔던게 역사적 사실이다. 정부 스스로 북방정책의 시원을 6·23선언에서 찾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 또한 엄연한 국제적 현실이다.

그러나, 6공화국 들어서는 89년

연과 노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아직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 것이 없지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은 크게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태 발전은 북방정책의 목적으로 제시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에 어떤 관례를 지니고 있는가.

첫째, 우리 경제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교류가 증대하고

는 상당한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7·7선언이 완전히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전진적 자세의 정립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III. 경제전락과 외교

6공정권에 들어 초기에는 형평·복지·사회·정의 등을 경제적·정치적 통치이념으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고자 국가관료제 내부에 토지공개념 연구위원회, 금융실명제 도입, 세계개혁위원회, 행

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방정책의 긍정성을 보여주지 못한 단면이다. 이같은 과정은 3당합당과 북방정책을 전제로 한 지배층의 권력의 획득과 유지 및 재창출을 위한 대자본 등의 축적논리를 수용하고, 전략목표의 설정에서 이의 실현을 위한 수단의 선택, 전략적 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6공정권이 들어선 88년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전략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수단의

시커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초기의 북방정책에 영향을 받아 민주적으로 이행을 하느라 했으나 3당합당으로 인한 민족억압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정부 여권 내에서 두드러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무상차관 공공여부 및 액수결정이 정부내에서조차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결과 북방정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재정·무역적자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기 시작한 미국

클립스슈어

1. 국가의 성격과 정치권력의 형태
2. 제1공화국의 국가권력과 승공정책
3. 3·4공화국의 경제정책과 국가성격
4. 정의 사회 구현과 전두환 정권
5. 6공화국의 북방외교정책
6. 해방후 각 공화국의 성격과 본질(좌담)

모를 김영삼씨는 최소한의 경제개혁이 없는 건강하지 못한 경제야말로 외부의 국소의 압력에도 무너져버리는 남미형 경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IV. 재집권 시나리오

6공화국의 북방정책은 역대정권의 정통성 부재와 취약한 지지기반을 변전시키기 위한 지배세력 내부의 전략적 대안으로 출발했다. 다시 말해 북방정책은 첫째, 양·정의 양면에서 꾸준히 성장해온 중간계층집단의 정치·경제적인 요구를 수렴, 이들의 일탈을 예방하는 6공정권 이후 재집권 전략이며, 둘째 80년 이후 꾸준히 성장해온 민족민주운동세력을 고립화, 탄압하며, 세계 이같은 과정을 지나면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제도권 야당세력을 흡수해 친미보수연합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대로 6공초기 북방정책은 비밀외교투수 형식으로 추진됐으나 이후 김영삼·김대중 씨도 북방정책의 새로운 이미지를 군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양김씨는 6공정권의 북방정책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이들은 소련을 겨냥해서 ‘초당외교’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사실은 향후 대권경쟁을 대비하는 다목적 포석용으로 북방정책의 본질을 희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당통합은 이같은 정세적 조건의 총체적 산물이다. 물론 3

의 정치적 관심을 분산시키고 탈정치화하기에 급급했던게 사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6공정권의 북방정책은 이른바 민족민주운동권의 민족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겨냥한 것이었다. 북방정책이 갖는 반민족적·반민주적 본질을 꿰뚫고 나갔지만 주체적 조건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북방정책이 갖는 일부의 긍정적 측면마저 민족중에서 함의를 도출할 수 없다.

V. 국가발전의 종합 전략·요구

결과 6공정권 절반이 지난 현재 재집권을 향해 어떠한 정치스케줄을 설정하고 있는지 분명치 않으며, 현재의 정국은 정치적 힘관계에서의 비대칭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권자세의 불안정성이 내외적으로 림에도 불구하고 범야권의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정국의 주도권을 야권이 갖지 못하는, 다시 말해 정권의 위기와 야권의 위기가 상호동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6공정권이 재집권후반기 전략의 누수현상을 방지하고 국내정치구조의 불안정성을 북방카드를 이용, 정면돌파할 것만은 사실이다. 이미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방한이 급작스럽게 전사되었으며 이로써 또 한차례 국내정치구조의 변형을 시도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91년 상반기는 광역외교 선거로 차기대권구도를 가늠하는 일대 고비일 뿐 아니라 선거국면을 맞아 민족민주운동의 전술적 총공세를 펼쳐갈 시기라는 점에서 고르바초프의 전격방한은 6공정권의 다목적의 마스터카드가 될 것은 확실하다.

92년 말까지의 6공정권 후반기는 한국사회의 모든 정치세력들에게 장기적 입지와 진로를 결정하는 갈림길에 될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국면의 정세에 커다란 변화를 미칠 변수들은 한국경제의 동향, 특히 사회주의권국가들과의 경제교류, 남북관계의 추이 변화, 대중소관계 등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역기능은 북방정책을 한국민족과 국가발전의 종합적인 전략에 체계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권력유지의 장치나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북방외교정책은 정권적차원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진정한 외교확대와 민족적 통일로 연결되어야 한다.

정 우 곤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

체제강화에 골몰한 정권본질

2월 헝가리와 수교 이래 알바니아를 제외한 동구제국, 소련과 차례로 수교했으며 아프리카 전선국가 4개국과 일부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세력을 제외한 사회주의권 국가들로부터 어느 정도 실체를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한국과 같이 자본주의·초기나 청년기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원시적인 축적을 위한 가혹한 착취가 불가피한 단계이기 때문에 외국에 대한 전략적인 원조나 호조건의 차관을 공급하는 계급에 뛰어난 여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무리하게 자본경쟁에 참가하게 되면 1920년대 일본의 만주 진출처럼 중국국가 뿐만 아니라 일본국가까지 괴롭히던 제국주의적 사태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으나 오늘날은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정책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현재 한국의 북방정책은 준비체제가 갖추어지지 않고 전에 일을 시작해 놓고 보자는 식의 조급한 과시욕의 발상에서 추진된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또한 민간차원에서 점증주의의 방법으로 여유있게 조정관리하며 확대하여 가지 않고 처음부터 권력의 중추, 다시말해서 정부 자체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또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정책적 과실을 스스로 자초하였다고 비유할 수도 있다.

한편 북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가 구사하는 기본전략은 경제적 진출을 바라는 국내자본의 요구를 최대한 지원하면서 경제교류의 확대를 사회주의 국가들과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외교관계 수립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것이다. 현재까지 경제면에서 가장 괄목하게 진출한 곳은 중국이며, 정치적인 면에서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헝가리와 국교정상화이다. 이와 관련하여 7·7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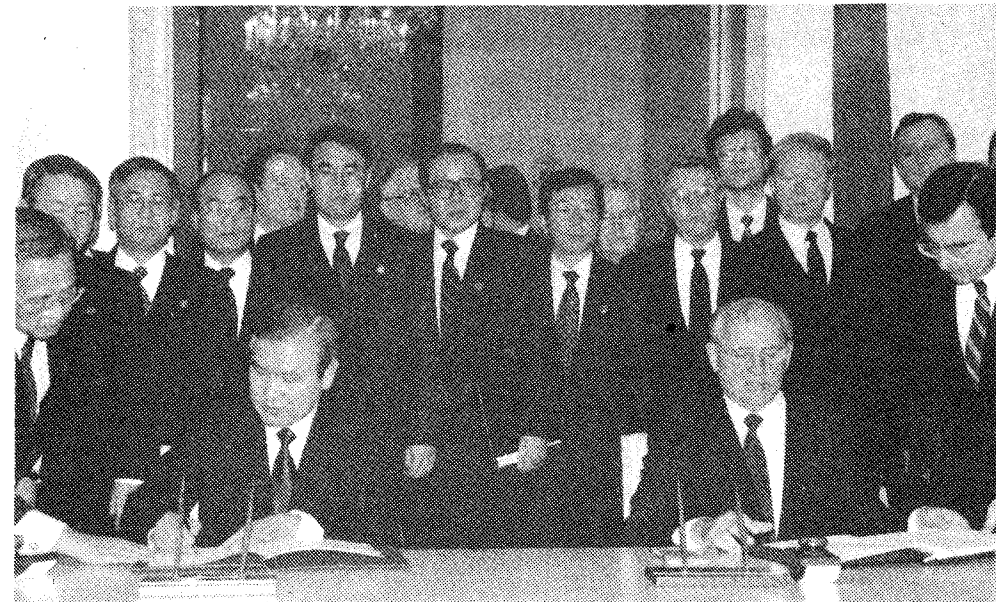
있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내재적 요구이며 오늘날 전세계적 수준에서 진척되고 있는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 간의 경제협력 증대라는, 이 시대의 주요한 역사적 흐름에 속한다.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속에서 북한 역시 자본주의권과의 경제교류를 시도하

정개혁위원회 등 각종 기구를 설치, 운영하여 왔다. 이러한 가시적인 경제적 민주화 조치 이면에서는 한국사회의 지배층 전체의 경제적 복지를 위한 경제전략이 섰다고 할 수 있다. 이는 89년 공산정권과 1990년 3당 합당으로 정권유지, 권위주의체제 유지의

선택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대립되는 사회세력간의 역학관계, 이데올로기, 허위외교 등을 보다 교묘히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목표를 달성한다는 점이다. 88년 초 신내각이 출범하면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부체제 완

의 무리한 시장개방 요구와 그에 따라 불가피해진 산업·무역구조 조정의 필요성에서 순수하게 출발하여 6공정권 중반에 와서는 오히려 북방정책을 경제적으로 재검토했던 것을 구사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경제개혁은 80년대 이래의 세



◇6공정권은 정치적 위기국면마다 적절한 북한카드, 북방카드를 내밀어 국민을 탈정치화 하려한다

소련 및 동구교역, 지배계급의 여론조작 산물 취약한 지지기반 극복위해 전략적 목표삼아

고 있지만 그들이 견지하는 자력갱생 경제건설노선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둘째, 그동안 추진된 북방정책은 남북관계와 북한과 미국관계의 실질적 개선이 없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화만 가져오는 결과를 유발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추진되는 북방정책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고립화하면 북한을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는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이 되어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통일문제와 민주화문제 등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의 격화로 국내적으로

방향으로 급선회하는 시점에서 유발되고 있어 재집권 경제전략과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과도한 자본축적에 의한 산업화의 부작용은 6공정권 초기에는 정부의 경제민주화정책의 추진으로 어느정도 해소되다가 3당 통합 이후 다시 새로운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초 3당 통합은 경제발전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구조적인 조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아무런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은 당초의 명분을 무색케 한다. 이러한 현상은 북방정책 내지 7·7선언에 의해서 국민적 기대를 높

할 것임을 선언했다. 적어도 표면 상으로는 민중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할 뜻을 비친 것이다.

그러나 자율화, 분배개선, 균형발전 등의 정책방향이 제시됐을 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정책수단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우선이나 복지우선이나 하는 논쟁이 발생한다. 마치 사회복지를 확충하면 필연적으로 경제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정책목표의 결정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안정과 복지를 대립시켰던 것이다.

이렇듯 6공정권은 경제정책면에서도 권위주의적 성격을 강화

계적 경제정책기조와 전혀 어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대투쟁에 의해서 획득되었다. 그러나 보수대연합에 의하여 경제정책은 또다시 5공으로 회귀하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에 가장 예감을 느끼고 있는 김영삼의 ‘사상’과 고르바초프의 ‘그것간의 유일한 공통점은 시장원리에 대한 강조이다. 그러나 후자가 민중의 수요와 공급을 원활히 연결시키기 위한 교육책이라면, 전자는 경제개혁, 분배에 반대하는 한국 지배층, 자본가들의 무기일 뿐이다. 아마도 정권에 대한 ‘무지’때문에 보수대연합을 적극 추종했는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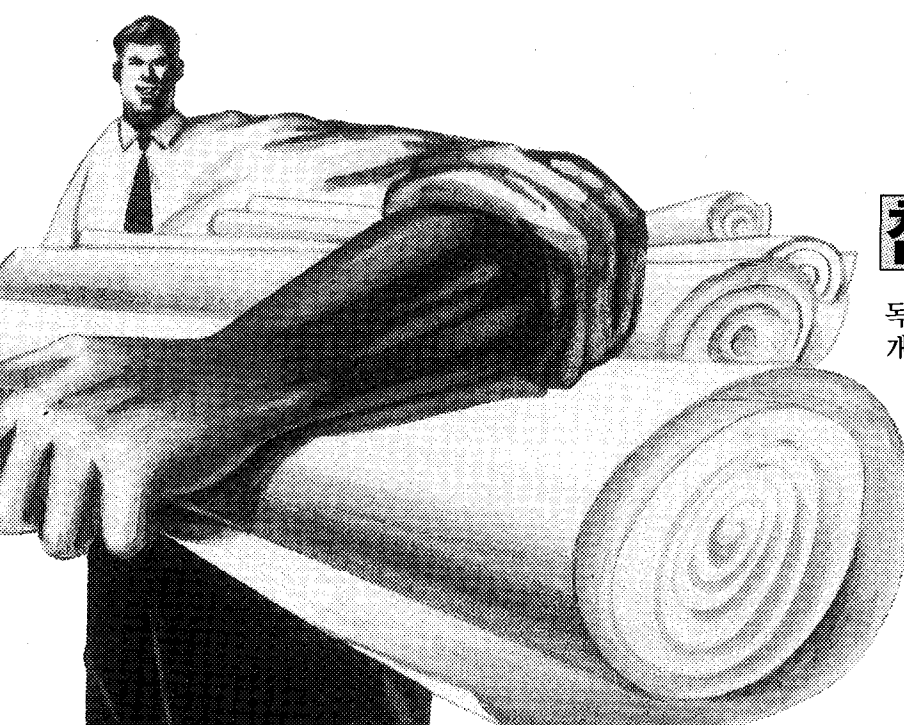
당통합은 여소야대의 국내정치적 학구조를 재현하기 위한 지배세력의 집요한 공작정치 산물이었으며 세계사적 흐름에서 민족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구국적 결단으로 치장되어 버렸다.

김영삼, 박철언의 소련방문, 작년 6월초 샌프란시스코의 갑작스런 한·소정상회담은 당시 태동하던 야권통합 열기를 꺾어버렸고 오는 19일의 제주도 정상회담 역시 국내 정치학구조를 이용한 ‘살아남기’전략에 불과하다. 이렇듯 6공정권은 정치적 위기국면을 맞이할 때 마다 적절한 북한카드 내지 북방카드를 내밀어 국민들

하이테크의 숨결이 깃든 단1장의 엔진설계도 - 자동차 한국의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기술의 산실 - 마복리연구소 엔진설계부

20세기 과학 문명의 꽃 - 자동차의 엔진 /
고난도 기술집약체인 첨단 엔진개발을 위해 수백번 이상이나 설계 도면을 수정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
2만여 가지의 부품과 기계장치들이 조화를 이뤄 인간생활을 더욱 편하고 유익하게 하는 자동차 /
설계 도면 한장 한장마다 뜨거운 정열을 쏟으며 첨단 자동차엔진의 꿈을 잉태하는 곳 - 이곳이 완벽한 하나를 위해 천(千)의 노력을 다하는 현대 마복리 연구소 엔진설계부입니다.



첨단 자동차 기술 - 우리가 이끌어간다.

독자적인 기술로 고유 모델의 엔진을 개발하는 일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초가 뒤따릅니다. 연비 향상을 위한 엔진의 경량화, 고성능화 및 저공해화를 위해 개념 설계에서부터 상품생산을 확정하는 최종 도면에 이르기까지 - 완벽함 하나를 위해 수개월, 수백번의 설계 변경을 감내해야 하는 엔진설계부의 연구진들 /
오늘도 이들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 창조정신과 도전정신으로 한국 자동차기술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직, 도전하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다.

지금쯤, 캠퍼스의 도서관 책더미속에서, 운동장에서, 실험실습실에서, 연구 무대에서, 동아리방에서 멋진 학창생활을 가꾸고 있는 대학생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패기와 정열로 가득찬 젊은 엘리트들의 모습에 부러움을 느끼고 동시에 아찔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기 쉬운 진리의 길에서 굳건하게 도전하며 목표를 성취하는 이땅의 젊은이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나누며, 미래를 꿈꾸며
현대자동차가 밝은 내일을 추구해갑니다.